

일본의 사회보장·세제 일체개혁안 주요내용

개혁안의 포인트는 출산·육아 지원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모든세대가 대응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맞는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임.

이와 함께, 사회보장 재원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 하겠다는 내용

- 12.1.6일 「사회보장·세제 일체개혁 기본안」이 일본 각의에 보고. 이것은 작년 7월 보고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향후 여야간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관련 법안을 제출 예정

□ 사회보장개혁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성의 변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등 고용 기반의 변화, 가족형태·지역기반의 변화 등,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의 균열이나 빈곤·격차 확대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
- 2040년까지 일본의 고령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에는 고령화율이 30%에 육박하여 일본의 고령화 수준이 세계 최상위에 랭크될 전망

- 50년전 일본은 노인 1명당 9명이 지탱해주는 이른바 「행가레형」 사회이었으나, 근년에는 1인당 3명이 지탱해주는 「기마형」으로 변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50년에 전국민의 40%가 고령자들로 구성, 노인 1인당 현세대 1.3명이 지탱해주는 「목마형」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는 지금상태로도 전체 급부액 만큼의 부담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 향후 인구구성의 변화가 더 진행되더라도 연금,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부면에서는 고령세대를 중심으로, 부담면에서는 현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어, 급부·부담 양면에서 인구구성의 변화에 대응한 세대간·세대내 공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
- 앞으로는 급부면에서, 출산·육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을 강화하고, 전세대 대응형 제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부담면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맞는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사회보장재원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

- 사회보장 유지에 필수적인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의

재정은 세수가 세출의 50%도 채 되지 않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장기채무잔고가 2012년도말 GDP의 195%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 국제시장에서 일본의 신인도가 떨어져 금리가 크게 상승, 재정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것임

- 또한, 일본의 경우 현재 일반세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관련지출의 비율은 50%를 초과하고 있어 세수가 세출의 50%도 되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 사회보장관련비의 상당부분을 차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임
- 이에 더해 매년 1조엔 규모의 사회보장지출의 자연증가분이 불가피. 현세대가 기대하는 사회보장급부에 대하여 급부만큼 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채, 그 부담을 차세대가 계계 떠맡게 된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 만이 아니고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국민 모두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경비는 국민 전체가 분담해야만 함
- 전 세대를 통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세대 내에서도 부담능력에 따라 분담토록 하는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세대간·세대내 공평성을 확보하면서 사회보장의 급부수준에 걸 맞는 부담을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만 함
- 동시에 이번 개혁에 반영되는 사회보장책은 연금국고부담 1/2의 항구화를 포함, 소비세율의 인상에 의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전제로 하고, 사회보장의 기능강화나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에 걸 맞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이번 사회보장·세제 일체개혁의 목표는 사회보장기능의 강화·유지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재건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임
- 향후 저출산·고령화 진행에 따라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2020년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 흑자화 달성,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강도있는 추진이 필요

〈사회보장제도와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성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	
1. 미래에 대한 투자 강화(출산, 육아지원)	-출산·육아 신시스템을 창설, 출산·육아를 지원	1. 소비세의 사회보장재원화	-사회보장의 기능강화·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인상
2.의료·간병 서비스 보장강화,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safety net) 강화	-고도 급성기환자에 대한 의료자원의 집중투입 등 입원의료 강화, 지역포괄적인 케어시스템 구축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간병 서비스 제공		
3.빈곤·격차대책 강화 (중층적인 안전망기능 구축)	-저소득 연금수급자등 저소득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4.다양한 근로방식을 지탱하는 사회보장 제도(의료, 연금)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확대, 피고용자연금의 일원화 등에 의해 출산·육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2.세제 전체를 통한 개혁	- 여러차례에 걸쳐 소득세 개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하되었으나, 앞으로는 누진성 제고, 자산과세 개선 등 세제 전체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
5.전원 참가형 사회, 품위있는 일자리 (decent work)	-젊은 층을 비롯한 고용대책 강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처우 개선		
6.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	-소비세의 용도를 현역세대의 의료 및 육아에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국가부담 1/2을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사회보장 부담을 분담		

□ 경제성장의 선순환 실현

- 사회보장은 수요·공급 양면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음. 일체개혁에 의한 사회보장의 안정적 재원확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확립은 장래 불안을 줄여주고 소비나 경제활동을 확대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이 됨

- 또한 현재 의료·복지 산업에서 약 700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어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사회보장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서 젊은 세대도 포함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장 분야에서 잠재수요를 가시화함으로써 의료, 간병육아분야에서 고용창출, 라이프이노베이션 추진,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신규진입 촉진 등으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실현

□ 평가

- 개혁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개혁을 보면, 급부를 선행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며, 기능 유지·확대는 개혁의 하나의 목표이긴 하나 동시에 효율화·중점화가 병행되어야만 함
-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소비세율 5%인상분 중 1%상당이 사회보장 기능강화에 사용될 예정임. 사회보장기능의 내실화와 관련된 지출비중이 3.8조 엔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비하여 효율화·중점화는 1.2조 엔으로 계상되어 있음
- 이 때문에 효율화·중점화가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세율이 1%상당의 재원으로 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재정건전화 목표가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참고자료>

사회보장·세제일체개혁 기본안(내각관방, 1월7일)